

“호남 반도체, 농업용수 낡은 물길 개선 시급”

나주호 93km 개수로...증발·누수로 큰 손실

日 관수로화율 35%...한국 1% 미만 그쳐

이재호 “스마트 관수로화 등 단계적 전환 必”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호남 반도체 성공을 위해 필요한 1일 65만ℓ의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려면 반세기 넘게 쓰인 낡은 농업용수 공급 체계부터 혁신해야 한다”며 나주호 노후 용수로의 ‘스마트 관수로화’와 영산강 유역 댐들의 단계적 관수로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 반도체 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 전용인 나주호에서 1일 10만ℓ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주호의 용수공급 체계는 개수로(開水路) 형식의 긴 용수간선(93km)으로 이뤄져 있어 증발과 누수로 인한 손실이 크고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나주호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관수로(파이프라인) 설치, 지하수댐 설치(사례: 진주 단목지구, 팔가농가 용수 공급), 지하수함양 시설, 강변 여과수 시설 등을 통해 안정적 용수공급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나주호 노후 용수로(103km)를 ‘스마트 관수로’로 전환하면 물 손실을 줄이

는 동시에 사계절 적시 용수 공급이 가능해져 미래 영농에도 대비할 수 있다”며 “일본은 이미 농업용수 관수로화율이 35%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스마트 관수로화를 적극 관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나주호뿐 아니라 영산강 유역 전반의 농업용수 공급 체계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관리시설 증가와 시설 노후화, 비용 증가 구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유지관리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담양댐·장성댐·광주댐은 나주댐과 함께 영산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으로 1970년대 초반 조성돼 50년이 지났으며 용·배수로의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들 댐의 용·배수로를 관수로로 전환해 농업용수와 산업용수를 함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산업 용수공급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낡은 물길을 그대로 두고 물을 나눠 쓰자고 하면 농업도, 반도체도 모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관수로화를 통해 새는 물을 잡으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반도체 용수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나주호 스마트 관수로화와 영산강 유역 관수로 전환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예산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민보고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클러스터 ‘전격전’...숙련인력 확보 관건

기능인력 28년 1천453명→30년 3만명 전망

동기간 용인서도 공사...인재 확보 심화 우려

용접·배관·전기 등 인력 조선·철강 핵심 역할

김원이 “외국인력 도입 등 상생 대책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구축에 필요한 숙련 기능인력 확보와 주변 조선·철강산업의 인력 공백에 대비한 정부의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건설업체 제출 자료를 취합한 결과(A사 추산 기준), 호남 반도체 현장의 일일 기능인력 투입 규모는 2028년 말 1천453명에서 2029년 말 2만3천288명, 2030년 말 3만1천567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시기 용인 등에서도 반도체 공사가 진행돼 숙련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반도체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용접·배관·전기 등의 숙련인력이 주변 조선·철강산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호남 지역 조선업(HD현대중공업·대한조선)의 전체 고용인력은 약 1만4천명이다. 전문건설인력

회 제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동부권 철강산업 관련 건설 기능인력은 6천100명이다. 두 인력을 합하면 약 2만명으로, 반도체 팹 1기 건설에 하루 투입되는 인력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 공사가 본격화되면 수요가 겹치는 직종의 숙련인력이 광주권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기존 산업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임금과 안전·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조선·철강업체 등에서 인력이 이탈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거제 조선소의 숙련인력이 평택 반도체 건설현장으로 이동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도체 건설인력 확보를 개별 현장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숙련인력 양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인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제출자료에 따르면 배관공 양성에는 1~2년, 용접공과 계장공은 2년 이상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팹 건설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2028년 착공에 맞춘 인력 수급 계획도 앞당겨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 조선소와 철강업체의 공정 자동화와 AI 도입을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 구조 조정으로 현장을 떠났던 숙련인력의 복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통상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비

자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며 “산업부도 관련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수 기자

진보당 “반도체 성과 시민 삶에 연결해야”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출범 100일을 맞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연결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7일 입장문을 내 “전남광주의 비약적인 성장과 도농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반도체 산업의 안착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공장 건설과 완제품 양산 속도만으로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의 성공 기준으로 ▲노동권 침해나 후퇴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생태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 ▲산업 이익이 특별시 곳곳의 삶에 현장에 고르게 돌아가는 구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 1월부터 도시지역 농촌동을 포함한 모든 농어촌 지역에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명진 기자

“탄약고 이전 차질 우려...대체안 마련해야”

전남광주시의회, 주민지원책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광주 서구 마륙동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대체 이전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도로교통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방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탄약고 이전 대책과 주민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륙동 탄약고 일대는 1975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건축·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탄약고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방부는 2005년 탄약고 이전을 승인했으며 현재까지 총사업비 3천282억원 중 2천639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내부로 옮긴 뒤 군공항 이전 시 다시 이전하는 방식

으로 사업이 추진돼왔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일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되면서 기존 이전 예정지가 반도체 팹(Fab) 부지에 포함돼 계획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와 특별시는 63만평을 우선 활용해 2027년 상반기부터 반도체 산단 조성에 착수하고 2028년까지 군공항 기능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탄약고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주변 도로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금호코아루-U대화진입로 간 도로개설 사업은 보호구역 해제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준공기한이 당초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됐다.

도로교통위는 탄약고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안과 일정을 마련하고, 이전 전이라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약고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한 종합적인 주민지원 대책도 요구했다.

/변은진 기자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